

관세대응 119 Monthly Report

2026년 01월호

- 01 주요 정책
- 02 기관별 지원 사업
- 03 전문가 칼럼

지방 소기업 수출지원
'수출희망 1000' 참여기업 모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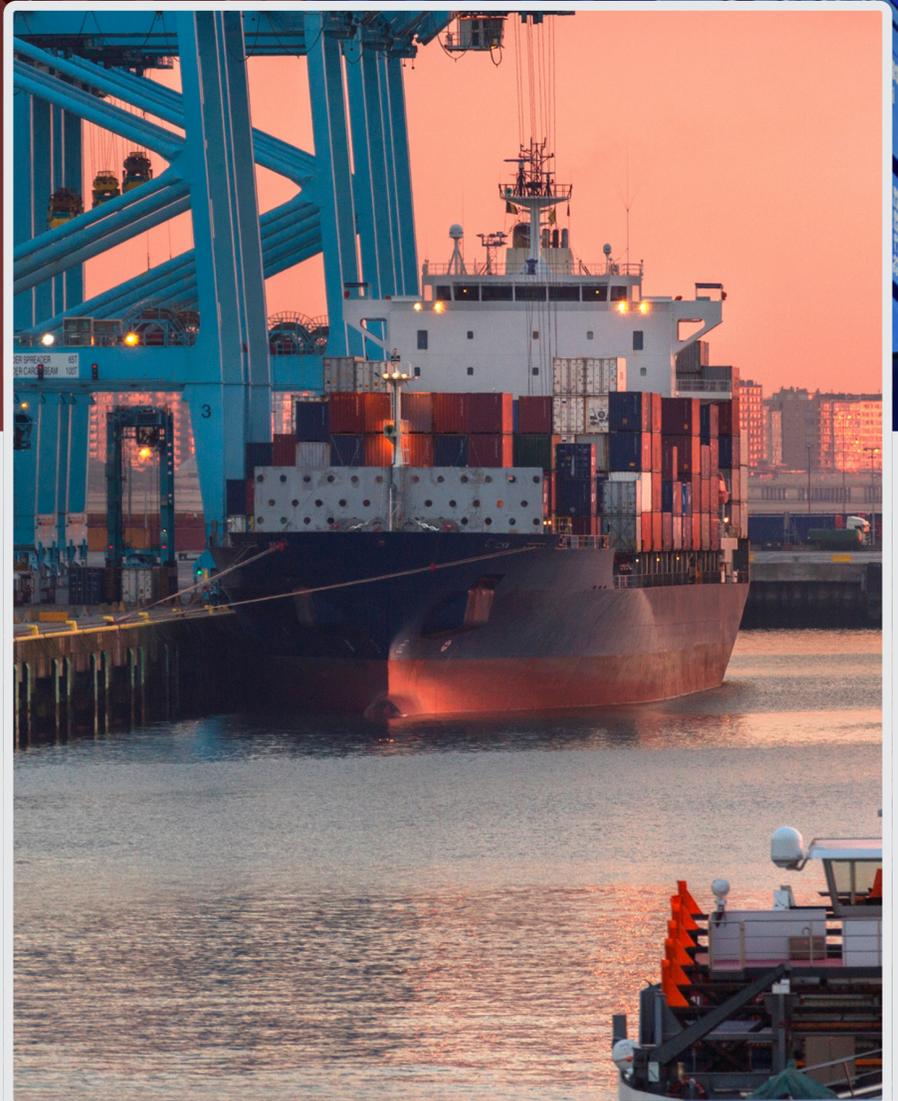
정부정책연관 분야 중소·중견기업 약 100개사
'K-수출스타500' 참여기업 모집 중!

전문가 칼럼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보다 준비가 중요하다.”

KOTRA 관세대응 119 전담반

02-3460-7348



01

주요 정책

사업명

K-수출스타500 사업

추진 목적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를
위해 수출 중추기업 육성 및 확대 필요
('26년 신규 국정과제 사업)

지원 내용

프리미엄 해외 마케팅, 인증, Post R&D,
무역보험/보증 등 참여기업 수요에 기반한
육성 패키지 서비스를 5개 기관 협업 지원

수출마케팅[KOTRA], 금융[무보],
R&D[KIAT/KEIT], 인증[KCL]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 2. 11. (수) 18:00

사업 예산

402억 원

사업 내용

정부정책연관 분야 중소·중견기업 약 100
개사/年 선정, 기업별 국고예산 매칭을 통한
5개 기관 협업 패키지 지원

⇒ 수출 1천만불 이상 수출 중추기업
5년간 500개사 육성

지원 대상

전략산업 분야 수출 1천만불 미만의 유망
수출기업(약 100개사)

중추기업 유지 및 확대전략을 위해
수출 1천만불 이상 기업도 일부 지원대상 포함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소비재

글로벌 브랜드
포지셔닝

진출 희망국 주요 도시 백화점 및 주요 유통망 연간 쇼케이스 운영
예: 프랑스 파리 갤러리 라파예트내 K-Beauty 쇼케이스(화장품 브랜드 팀 구성, 동반 입점)

주요국 유통망내 전문무역상사 활용 팝업스토어 운영
예: 미국 뉴욕 Saks Fifth Avenue내 K-Lifestyle 팝업스토어 (브랜드 협업)

개도국형

대관업무
연계 마케팅

정부 고위급 인사, 바이어·투자자의 C레벨 임원 등 의사결정권자 등
핵심 네트워크 아웃리치, 현지 기술 세미나, 방한 초청 및 실증단지 시찰,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지원 등

예: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도로수자원청 등 주요 발주처 유력인사 대상 개별 면담 및
피칭 주선, 방한 초청 및 지역 실증단지 시찰 지원 등

01

주요 정책

사업명

수출희망 1000

지방 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기간

참여기업 선정 ~ 2026. 12.

사업 규모

인구감소지역 포함 지방 소기업·소상공인
200개사 중 전년도 수출액이 '0~1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사업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 역량별 3단계 순주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 통해 3년간*
해외수출 지원

- '27.1.1 이후 기존 선발 기업 중 사업참여도,
수출의지 심사 후 '28.12.31까지 연속 지원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요건 1

'25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만 달러 미만' 기업*

수출실적은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요건2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 2. 1. (일) 23:59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01

주요 정책

주요 지원사항

지원 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내용은 별도의 신청·선발 절차가 있음

1

수출 전단계

교육 및 역량 강화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인증·법률·물류·관세 등 협업기관 서비스 연계</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 '수출전문위원'과 1:1 기업 매칭 및 무역 실무 안내, 바이어 교신 지원, 수출지원사업 안내 등 수출성사까지 기업 맞춤 수출 컨설팅 연간 지원</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수출역량 강화 실무교육</p> <p style="text-align: center;">KOTRA아카데미 연계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KOTRA 지방 설명회」 연계 수출 역량강화 교육, 지방특화사업 소개</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AI 용역 활용 E콘텐츠, 해외진출전략 수립</p> <p style="text-align: center;">E콘텐츠(기업, 제품) 다국어(3개국 선택) 제작 / 수출 유망국가 분석 및 진출전략 AI 리포트 제공 /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용 실무 가이드북 제작</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별 수출나침반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HS코드 6자리 기반으로 유망 수출국 추천 및 진출전략, 현지 주요 플레이어 등 수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 제공</p>

연 1회

연 2회

분기 1회

01

주요 정책

주요 지원사항

지원 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내용은 별도의 신청·선발 절차가 있음

2 수출 마케팅

컨설팅·사업수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분야별 심층 컨설팅</p> <p style="text-align: center;">기능별(인증·관세), 지역별, 품목별 수출 컨설팅 지원</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AI무역인재 양성사업 분기별 선발</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 청년 6-8명과 기업이 한 조가 되어 8주간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교신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AI 활용 buyKOREA 콘텐츠 제작 및 상품등록, SNS(Meta, LinkedIn 등) 마케팅, 무역관 통한 바이어 검증, 온라인 상담 지원</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온라인 B2B 플랫폼 입점 등 디지털마케팅</p> <p style="text-align: center;">알리바바 입점지원(전품목, 초보기업 대상) / 온라인 상시 상담</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사절단·상담회·전시회 등 오프라인 협업사업 선발</p> <p style="text-align: center;">붐업 등 수출상담회 / 지방특화사업연계 / 개별 수출상담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지자체·협단체 연계, 국내외 수출 마케팅 사업 전개 **비즈니스 미팅 AI 실시간 통역(60개 언어), 상담일지 자동 생성</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물류패키징 자문 및 해외물류배송할인 지원 선발</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DHL, EMS, 삼성SDS 등 물류사(10개사)를 통한 물류배송 할인 / 삼성SDS 수출물류, 수출 가격산정 등 무료 상담 / DHL 무역실무자 대상 교육, 전문통관팀 통한 수입통관교육 / 샘플 발송비 무료지원(10개사 연간 총 1,000만원 한도 내)</p>	

02

기관별 지원 사업



KICXUP 비즈모아

기업지원사업 연계서비스

AI 기반 기업 맞춤형 정부지원사업
매칭·추천 서비스

신청 시작일 상시
신청 마감일 상시
문의처 070-8895-7187

[→ 신청 바로가기](#)



유망바이어 매칭신청

2026년 1월 유망 바이어 매칭 신청,
tradeKorea 활용 바이어 주선

신청 시작일 2026. 1. 1.
신청 마감일 2026. 1. 31.
문의처 1566-5114

[→ 신청 바로가기](#)



무역장벽 및 기업애로 조사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17개 분야*)

*17개 분야 :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TBT, SPS, 지식재산권,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환경, 노동, 경쟁정책, 디지털무역, 기타

신청 시작일 2025. 12. 19.
신청 마감일 2026. 2. 13.
문의처 02-6000-5601

[→ 신청 바로가기](#)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협·단체에 수입규제 및 산업 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신청 시작일 2월 예정
신청 마감일 연말
문의처 02-6050-3683

[→ 신청 링크 추후 공개 예정](#)

02

기관별 지원 사업

카톡채널 'KATI 농식품 수출정보' 추가 시
사업공고 알림톡 제공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물류부담 완화(물류비 할인, 풀필먼트 지원 등)

신청 시작일 -
신청 마감일 -
문의처 02-2130-1484

→ 사업공고 미확정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농식품수출정보(KATI) 제공, 국가별 통관애로 해소 및 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신청 시작일 2026. 1. 26.
신청 마감일 사업별 상이
문의처 1566-1472

→ 신청 바로가기



보험료지원사업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지원 등 무역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시작일 2026. 1. 1.
신청 마감일 2026. 12. 31.
문의처 02-399-5322

→ 신청 바로가기

[접속경로] 공사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보험료지원 /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사업예산에 따라 지원불가할 수 있음

KBIZ 중소기업중앙회

무역구제 지원사업

외국기업의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시 선임비용 일부를 지원

신청 시작일 상시
신청 마감일 상시
문의처 02-2124-3294

→ 신청 바로가기

02

기관별 지원 사업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 코리아 재외공관 협력사업

재외공관, KOTRA 네트워크 활용하여
현지정부, 지자체와 보건의료 관련
세미나, 수출상담회 등 공동행사 개최

신청 시작일 2월초 예상
신청 마감일 미정
문의처 043-713-8967

→ 사업광고 미확정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YES FTA 전문교육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위한 FTA 실무,
증빙서류 작성실습,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등 교육 무료제공

신청 시작일 1월
신청 마감일 12월
문의처 1544-5702

→ 신청 바로가기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지원,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중견기업 무역·
통상 애로 발굴 및 조사 등

신청 시작일 상시
신청 마감일 상시
문의처 02-3275-0848

→ 신청 바로가기

KOSME 중소기업진흥공단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해외지사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

신청 시작일 2026. 1. 5.
신청 마감일 2026. 1. 16.
문의처 055-751-9715

→ 신청 바로가기

KOTRA 공동운영,
2월 모집은
2.12(목)까지

03

전문가 칼럼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보다 준비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단을 앞둔 무역기업의 현실적 대응 전략

김진정 관세법 변호사 (pa@acilawgroup.com)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에 따라 10%에서 41%까지의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는 많은 기업의 원가 구조, 계약 조건, 가격 전략 전반을 재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업계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한 관세 부담의 증대가 아니라, 이 관세의 적법성 판단과 그 이후의 환급 가능성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합법 여부이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이른바 232조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301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301조 관세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관세가 쟁점이고, 어떤 관세는 계속 유효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대법원이 검토하는 본질적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포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지 여부이다. 근본적으로 미국 헌법에 따라 관세 부과를 포함하는 조세권은 미국 의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부가 위임을 받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미국 행정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 Doctrine)'과 직결된다. 국가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IEEPA에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그 표현이 곧바로 의회가 보유한 조세 및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요지이다.

이미 하급심(미국무역법원 및 항소법원)에서는 수입업체(VOS Selection) 측이 승소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불법으로 판정되었고,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시장의 시각은 비교적 일관되게 행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전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과 헤지펀드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환급 권리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을 경우 환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현금이 걸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03

전문가 칼럼

다만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 논의되는 또 하나의 현실적 시나리오는 이른바 '부분 패소'이다. 이는 과거에 이미 부과 및 징수된 상호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되, 향후 동일한 방식의 상호관세 부과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와 결합된 형태로, IEEPA 적용 범위를 펜타닐 관련 관세에 한정하고, 일반적인 상호관세에는 IEEPA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이론적으로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과거 미국 대법원이 공익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 흐름을 감안하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향후 관세 부과 권한은 크게 제한되지만, 이미 납부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별 체감 효과는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설령 전면적인 위법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점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수된 상호관세 규모가 막대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괄적이고 신속한 환급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실무적 관측이다. 실제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실질적 관세 부담자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당한 행정적 및 법적 대응이 수반될 수 있다.

환급 국면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거래 조건이 DDP(수출자가 운송비, 보험, 관세까지 모두 부담하여 수입국 지정 장소까지 인도하는 조건)라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출자가 환급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FOB(수출자가 본선 적재까지만 책임지고 이후 운송비, 보험,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라면 수입자가 그 주체가 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관세 부담과 환급 귀속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급을 둘러싼 분쟁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관세 환급을 둘러싼 민사 분쟁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03

전문가 칼럼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상호관세 문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통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세 납부 내역과 통관 일자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관세는 통관 후 일정 기간(통상 314일)이 경과하면 '정산(Liquidation)'이 이루어지며, 이 시점을 넘기게 되면 수정이나 환급 절차가 크게 제한된다. 일부 대형 수입업체들이 관세 정산 연장을 요청하거나 소송에 나서고 있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산 이전에는 수정통관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정산 이후에는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Protest를 제기해야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산 시점과 관련 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호관세는 단순한 통상 정책 이슈를 넘어, 계약 관리, 컴플라이언스, 소송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리스크이다. 준비된 기업에게는 환급과 비용 회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동일한 판결이 아무런 실익도 가져다주지 못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은 기다림이 아니라 점검과 정리, 그리고 전략 수립이다. 대법원 판결은 결과일 뿐이며, 승부는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이 원고를 읽고 있는 시점에는 이미 선고되었을 수도 있으나, 상호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라면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환급을 전제로 한 준비에 선제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